【 주간이슈 】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부연구위원 신종협
부연구위원 황진태

□ 미국發 금융위기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새로운 기축통화질서(신브레튼우즈 체제)의 도입 논의가 유럽 경제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최근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은 금융규제 및 감독기능의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국제적 협력 강화 등의 공동원칙에만 합의를 보았음.

□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증대,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범국가적 감독 규정 마련, 다양한 신금융상품과 금융기법의 규제 등을 위하여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나 미국의 반대,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당면한 금융위기 해결 등의 이유로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

□ G20 정상회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신브레튼우즈 체제는 IMF를 중심으로 한 현 국제금융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각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부 이행사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최근 한국의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완화, 보험업법 개정안 등으로 대변되는 규제완화 조치가 신브레튼우즈 체제에서의 규제 및 감독 기능 강화와 상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임.

□ 향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세계금융질서 재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신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는 전략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브레튼우즈 체제

가. 금융위기로 촉발된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 논의

□ 미국發 서브프라임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됨에 따라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대한 자성론이 대두되면서 금융규제 강화 및 감독기능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o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의 일환으로 범국가적 금융규제 기준 마련, 다국적 금융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전세계 금융시장을 모니터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 등을 제안함.

o 브라운 총리의 제안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총재, 호세 마뉴엘 바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직·간접적으로 동의를 표하였으며,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G20 국가 정상회의를 제안한 결과 11월 15일 워싱턴에서 동 회의가 개최되었음.

□ 유럽 국가들의 주장에 대해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가들도 일부 동조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발언권이 약해지는 대신 유럽 및 신흥 국가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어가는 추세임.

o G20 정상회의 후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국제금융 및 통화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음.

o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10월 28일 러중 포럼에서 양국간 교역 대금을 미 달러화 대신 루블화와 위안화로 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임.

o 브라질의 룰라 다 살바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글로벌 정치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역사적 회의로 평가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질서가 미국 중심에서 유럽 및 신흥 국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할 수 있음.

<표 1> 국제통화 시스템 변천사

시 기	협 정 (환율제도)	특 징
1944.7 이전	금본위제도 (고정환율제도)	· 금본위제도는 각국이 일정 한도의 금을 보유하면서 자국통화의 가치를 금 보유량에 연동시키는 제도임. · 무역적자 발생 → 금 보유량 감소 → 통화량 감소 → 총수요 감소 → 디플레이션 → 가격하락 → 수출 증대 → 무역적자 해소의 패턴을 따름. · 금 생산량이 한정된데 반해 경제규모는 확대되고 무역량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금본위제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됨. · 금본위제도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걸맞는 화폐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공황의 원인이 됨.
1944.7-1971.8	브레튼우즈 체제 (고정환율제도)	· 금환본위제도는 한 국가의 통화(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금본위제도에 근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고정환율제에 입각하여 그 기축통화의 일정량을 보유하는 방식임. ·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하여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러를 유지함.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대규모 무역흑자에 기초하여 유럽과 일본의 전후복구를 위해 달러 유동성을 제공함. · 브레튼우즈 체제는 IMF와 IBRD(World Bank)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IMF는 무역적자에 의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지원함. · IMF 가입국들은 환율을 달러가치($35/ounce)에 맞춰 조정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IMF의 허락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세계 교역량 확대에 따라 각국은 달러보유를 선호함. ·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의 군비지출에 따른 달러의 과잉공급으로 달러화의 금태환성이 정지됨.
1973.3-현재	킹스턴 체제 (변동환율제도)	· 브레튼우즈 체제 하의 고정환율제도는 달러화의 금태환성 정지를 계기로 변동환율제도로 그 형태가 바뀜. · 시장개념에 기초하면서 사적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고, IMF의 기능 또한 축소됨.

나.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 주장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신브레튼우즈 체제는 1983년 5월 당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선진국 정상회담(윌리엄즈버그 서미트)을 앞두고 환율의 급격한 등락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럽통화(ECU)를 서로 연계시켜 현재 유럽통화제도(EMS)와 같은 체제를 만든다는 구상 아래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 o 당시 미테랑 대통령은 1973년부터 시행된 킹스턴 체제가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함에 따라 환율의 급등락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이 심해지자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제안하였음.
- o 그러나 상기 제안은 논의만 되었을 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였음.

□ 이후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었던 고든 브라운에 의해 다시 한번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 때 역시 실효를 보지 못함.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영국식 은행 구제방안(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의 국유화)이 눈길을 끌면서 현재 영국 총리가 된 고든 브라운의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 o 은행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대신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방식을 고수하던 미국마저 영국식 은행지원 방식을 따르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강화된 브라운 영국 총리는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를 유럽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주요 내용

가. 유럽 국가들의 신브레튼우즈 체제 구상안

□ G20 정상회의 이전 EU가 구상하고 있던 신브레튼우즈 체제 금융개혁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o 현재 그 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IMF를 대신해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동 기구를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의 조속한 안정과 신뢰회복을 도모함.
o 가급적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금융기관의 규제를 강화함.
o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
o 국제회계기준을 강화하되 시가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가평가 회계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임.
o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o 미국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 대신 주요국 통화를 링크시켜 이를 국제 기축통화로 사용함.

<표 2> 국제금융 개혁 방안

EU의 신브레튼우즈 체제 구상안	G20 정상회의의 공동원칙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금융거래 규제 및 감시 강화	금융규제 강화 및 감독기능 개선
과도한 위험투자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신용평가기관 감시강화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회계기준의 통일	국제협력 강화

나. G20 정상회의에서 협의된 공동원칙

□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기축통화 체계를 의미하는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금융시장 개혁을 위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건전한 규제와 감독 강화,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국제적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라는 5개의 공동원칙과 해당원칙에 대한 액션플랜을 제시함.

o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제반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함과 동시에 공시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o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금융거래, 금융상품,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함.
o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적 시장조작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함.

- o 금융위기의 발생 방지, 위기의 관리와 해결 등에 있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간 조정 및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함.
- o IMF와 World Bank의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신흥경제국들의 발언권과 대표성이 높아지도록 함.

3.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에 대한 찬반론

가.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의 필요성

☐ 국제금융시장 및 개별 외환시장의 안정성 증대

- o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이후 고착화된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는 국가간 자본이동 촉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 o 국가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헤지펀드 등에 의한 핫머니의 유출입을 통제하기 힘들게 만들어 각국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난립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연쇄적 부실을 유발하는 단초가 되었음.
- o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표면화된 현 시점에서 금융규제 강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확대 등을 표방하고 있는 신브레튼우즈 체제는 국제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 o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경우 개별 국가의 법규만으로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이나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
- o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범국가적 감독 규정을 마련하게 되면 헤지펀드 등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을 통제하기가 수월해지고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임.
- o 또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객관적인 신용평가 자료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근거 없는 루머 등으로 유발되는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화된 금융상품 및 발전된 금융기법에 대한 적절한 규제

- o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금융기법이 발달할수록 이들 상품이나 기법을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o 특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신금융상품의 경우 이를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규가 아직 미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상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o 신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금융상품, 금융기법 등에 대하여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 품목에 대한 규제가 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이나 법규를 불특정 다수의 국가들이 원용할 수 있는 이점도 발생함.

나.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

□ 미국의 반대

- o 과거 브레튼우즈 체제 발족 당시 IMF와 World Bank를 설립하고 미국 달러화를 국제사회의 기축통화로 정하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가 구축되었음.
- o 이후 베트남 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자 일부 국가들이 금태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미국의 닉슨 당시 대통령이 금태환정지 선언을 함에 따라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었지만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 o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출범시킬 경우 미 달러화에 일본 엔화, 유로화 등을 연계시켜 국제 기축통화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국은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도입보다 IMF의 기능을 수정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함.

□ 각국의 이해관계 집결의 어려움

- o 과거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당시 준비기간만 2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시 이해당사국들 간의 의견조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o 특히 이해당사국의 숫자가 과거 브레튼우즈 당시보다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금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발언권이 강화됨에 따라 참여국가들 간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o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헤게모니 다툼 또한 신브레튼우즈 체제 출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이 시급과제

o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전에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막상 G20 정상회의에서는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를 유보하였음.

o 여기에는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보다는 현존하는 IMF 체제를 수정, 보완하여 현실적으로 급한 금융위기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G20 회원국들 사이에 형성된 때문인 것으로 보임.

o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미국과 IMF를 중심으로 하는 현 체제가 금융위기를 원만히 해결함과 동시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경우 향후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음.

4. 신브레튼우즈 체제 전망

□ G20 정상회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신브레튼우즈 체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서로 상이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나, 금융규제 강화 및 감독기능 확대 등에 있어서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고 있음.

□ IMF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통하여 국제금융질서를 구축하자는 유럽 국가들의 주장에 반해 미국은 현존하는 IMF의 기능을 수정, 보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

o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IMF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보여 유럽의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함.

□ 현재 미국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으나 과거 일부 유럽 국가들은 달러화와 더불어 주요국 통화를 상호 연계하여 기축통화로 사용하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음.

o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 달러화가 초약세 현상을 보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바스켓을 기축통화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o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 통화를 국제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통화바스켓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어느 국가의 통화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뒤따를 수 있음.

□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강화 및 감독기능 확대라는 유럽 국가들의 주장을 미국이 대폭 수용한 대신 상기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신브레튼우즈 체제가 기존의 하드웨어(IMF 중심의 현 체제)는 고수한 채 소프트웨어(세부 이행사항)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시사함.

o 향후 국제금융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EU의 발언권 강화가 예상되고 신흥경제국들도 세계경제의 주류로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제금융시스템의 형태는 경제블록간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것임.

5.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가. 한국의 금융환경과 신브레튼우즈 체제

□ 국내 금융규제 완화

o 한국은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보험업법 개정안 등 각종 금융법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음.

* 금융경쟁력 제고와 대형 투자은행이 보여주는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증권 및 투자관련 업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계의 기능주의, 겸영허용, 투자자보호 제도 등을 근간으로 삼고 있음.

* 금융선진화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내외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함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조치를 취할 예정임.
*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겸영업무 확대, 사후심사를 통한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 자율성 제고,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o 한국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은 G20 정상회의에서 협의된 금융규제 강화 방안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금융규제 수준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신브레튼우즈 체제가 주장하는 금융규제 강화와 상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임.

* World Bank의 규제관련 분야 평가에서 한국은 178개국 중 30위를 기록하여(그 외 창업부문: 110위, 고용·해고 여건: 131위) 미국의 3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또한 IMD가 발표한 은행규제 부문에서도 한국은 55개국 중 53위를 차지하여 미국의 14위보다 한참 뒤쳐져 있음.

□ 감독 기능은 강화

o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은 규제 및 감독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어 G20 정상회의 및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감독기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o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규제 완화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 자본시장통합법에는 투자권유 및 광고의 규제, 적합성 원칙 도입,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에 대한 발행 공시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됨.

o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심사제도, 내부검증 시스템 구축, 과징금 제도,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소비자에 따라 보호수준 차등화,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 허위광고 규제 강화 등을 포함시킬 예정임.

나.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방안

□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o 한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와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보임

으로써 국제금융질서 재편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임.

- o 한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영국, 브라질과 함께 차기 G20 회의를 준비하는 사실상의 공동의장국으로 선정되어 향후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o 또한 11월 22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향후 1년간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는다(stand-still)는 주장을 역설해 실제로 공동선언문에 반영하였는데,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중립적 위치 견지

- o 국제금융질서 재편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신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 o 한국은 아직까지 유럽 국가들보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행동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브레튼우즈 체제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의사표현에 있어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규제는 국제수준까지 완화, 그러나 감독 기능은 강화

- o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은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신브레튼우즈 체제 또는 G20 정상회의 등에서 협의된 금융규제 강화 기조와는 서로 상반되는 듯 보임.
- o 그러나 현재 한국은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수준만큼 금융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할지라도 신브레튼우즈 체제가 주장하는 금융규제 강화 조항과 서로 상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임.
- o 즉, 한국은 금융규제를 국제수준까지 완화하는 대신에 금융감독 기능은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임 KiRi.